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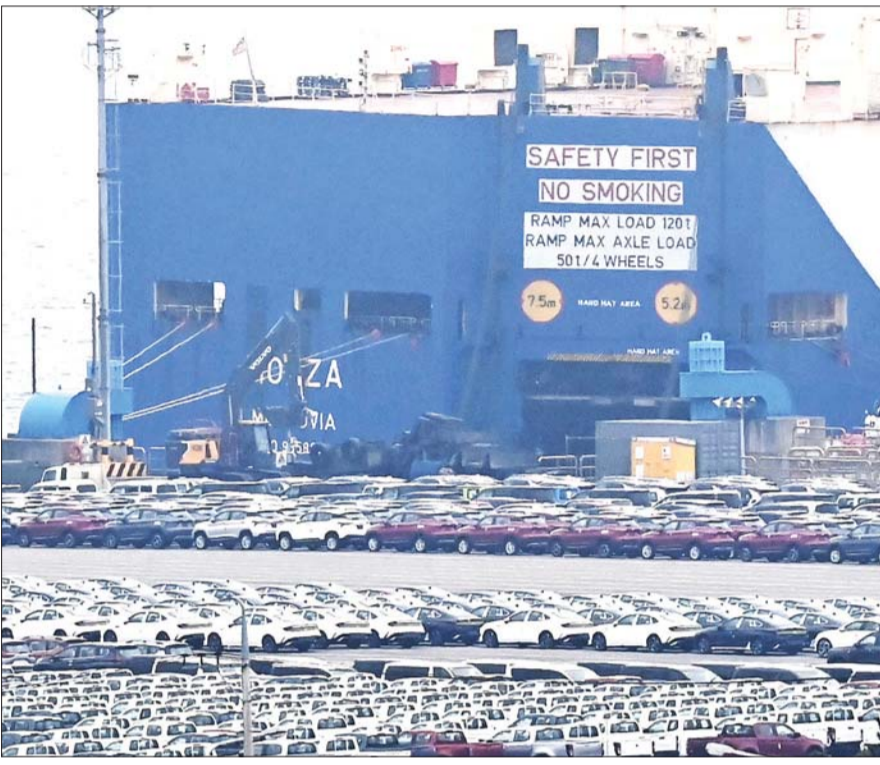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2607.15 (-36.79)	코스닥 707.49 (-8.99)
금리 (미국 3년) 2.622 (+0.004)	환율 (원/달러) 1465.95 (-0.35)



## 韓 수출 1위 자동차에 25%... 트럼프, 또 '관세폭탄' 날려

철강·알루미늄 이어 세번째 자동차는 내달 2일부터 부과 엔진 등 부품은 5월31일 이전 관세 여파에 증시·환율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부과되는 관세로,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예고돼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



27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 포함)는 물론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핵심부품도 포함된다. 자동차 관세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월 3일 이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 발표 여파로 증시와 환율도 요동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다. 엔비디아는 5.74%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27% 내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떨어진 2607.15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15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4.

28%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아 역시 3.45% 내렸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SK하이닉스가 3.27%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69.0원에서 시작해 개장 직후 1471.5원까지 올랐다가, 1465.3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의 부진이 겹치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매출 출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다음달 2일 발표될 상호관세를 앞두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내달 2일 부과될 전망이다. /한용수·원관희 기자 ys@metroseoul.co.kr

## 전 재산 팔아도 빚 못갚는 '고위험가구' 39만 달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유부채 72조, 전체의 4.9%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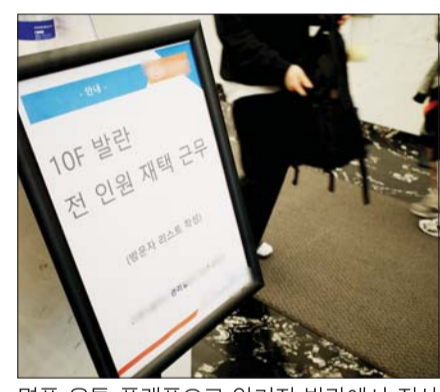
보유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3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원으로 전체 가구의 4.9%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인 38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4.9% 수준이다. <관련기사 4면>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40%를 넘겨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부채자산비율(DTA·총부채÷총자산)도 100%를 넘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도 어려운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위험가구의 DSR은 75%이며, DTA는 150%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은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고위험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위험가구의 DSR과 DTA의 중위 값은 각각 70.9%, 149.7%로 수도권 고위험 가구(78.3%, 15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8.5%로 수도권(5.1%)보다 높고, 소득 기반이 낮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고위험 가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금융부채 기준)을 시산한 결과 지난해 말 지방 및 수도권은 각각 5.4%, 4.3%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의 경제성장성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도 하락해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조기집행 및 부동산시장 유동성 지원 등 대응방안을 통해 지방 고위험가구의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제2의 티메프 터지나... 발란 '정산금 지연' 발생

발란 '무대응'에 판매자 불안 증폭 본사에 '전 직원 재택근무' 내걸고 대표, 연락두절에 '확인중' 답변만

명품 플랫폼 발란에 정산 지연 사태가 터졌다. 회사 측이 명확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과거 '티메프 사태'를 떠올리는 판매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4일부터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란은 24일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 검증 과정에서 과거 거래 및 정산 내역 확인이 필요해졌다"며 정산 지연 사실을 공시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이 이어지면서 판매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부터 내부 임직원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발란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 정산 일정 등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발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란의 모든 채무는 일시적으로 동결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알려진 발란에서 정산금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직원 전원의 재택근무를 알리는 게시물이 설치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변제를 받게 된다. 그간 발란은 투자 유치를 내세우며 회사 성과를 홍보해왔다. 지난 2월에는 실리콘투로부터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실리콘투는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마켓 운영 대행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당시 발란 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전개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불과한 달여 만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실제 2015년 설립된 발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자를 쌓아왔다. 누

적 적자는 총 700억원을 넘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4억원, 2021년 186억원, 2022년 374억원, 2023년 100억원 규모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적자 폭을 확대해 왔다. 현재 발란 본사에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입점 판매자 20~30명이 발란 본사 현장을 찾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항의하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매자가 정산대금 지연 관련 발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발란 관계자와 만났다가 사내 컴퓨터에서 기업회생 자료를 발견하면서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발란 측 관계자는 "파트너(입점 판매자)분들이 사무실에 오셨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다들 재택근무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발란 측의 대응이 없다면 입점 판매자들은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40여명이 참여한 판매자 채팅방에서는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 끝 아니냐", "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하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한다", "단체 행동에 나서서 뭐라도 받아와야 한다" 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우원식,尹 탄핵 심판 촉구... "한 총리는 마은혁 임명하라" /사진 뉴시스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김문수 8%

▲ 한 대행 "통상 전쟁 피해 최소화...정부-민간 네트워크 총동원"  
▲ '이재명 무죄'에 홍준표 "판사에 기대 대선 말자"

▲ 고운사 간 이재명 "복구 예산 걱정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나경원 "이재명 무죄, 민주주의 근간 흔들 우려"